

선관위 특혜 채용, 왜 청년들이 더 분노하나

에스프레소

이 동 수

청년정치쿠루 대표



공정과 평등을 다룬 유명한 그림이 있다. 키가 다른 세 아이가 야구장 담장 앞에서 서 있는 바로 그 그림이다. 담장 높이보다 키가 큰 아이는 야구 경기를 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키가 보통인 아이와 작은 아이는 경기를 보려면 무언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 여기서 상자가 모두에게 한 개씩 주어지는 건 기회의 평등(equality)이다. 단, 이 경우에도 키 작은 아이는 경기를 볼 수 없다. 이때 키가 큰 아이가 자신이 밟고 있는 상자를 키 작은 아이에게 양보하면, 혹은 처음부터 상자가 그렇게 배분되면 세 아이가 모두 같은 눈높이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이런 결과의 평등(equity)이다.

발판이 될 상자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는 것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나눠주는 것 중 어느 것이 옳다는 정답은 없다. 그래서 기회의 공정함이나 결과의 평등이나 하는 건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된다. 이러한 가치관의 충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가 바로 시험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 진영은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태어난 집안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를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약자들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수능 시험이다. 대치동에서 ‘학원 뽕빵이’를 도는 학생과 농어촌에서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는 학생은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 그 격차를 좁히려는 숫자로 측정이 되지 않는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는 게 그들 주장의 요지다. 정량 평가보다 정성 평가라는 것이다.

많은 청년이 여기에 반기를 든다. 이들은 수시보다 정시가 낫고, 사법고시도 부활시켜야 하며, 여러 단위의 평가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지방 의원을 뽑을 때도, 진보 진영

진보는 ‘능력주의’ 죄악시하지만 현실은 기득권의 독식 너무 많아 고위직 자녀 채용 선관위를 보라 공정과 상식 사회 가는 계기로

은 이런 청년들이 시험 만능주의, 능력주의에 찌들어 약자를 보듬지 않는다고 힐난한다.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말이다. 반쪽짜리 진실이다. 2030세대가 시험으로 상징되는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이기심의 발로라기보다 현실을 향한 분노에 가깝다. 상자를 똑같이 나누지 않으면 키 작은 아이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갈까? 현실에선 오히려 키 큰 아이가 독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부모의 지위와 재력은 늘 정성 평가의 허점

을 파고든다. 면접 위원을 바꿔 아들을 채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의 사례처럼, 특히면 대두되는 입시·채용 비리가 그 사실을 증명했다. 중앙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을 보면 진보의 ‘꾸지람’ 보다 청년들의 분노가 현실에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특혜 채용은 대부분 경력직 채용에서 발생했다. 관계자들은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해 고위직 자녀 채용에 편의를 보줬다. 경남선관위는 직원 자녀 합격에 위해 면접에서 정당하게 점수를 받은 1·2순위자를 탈락 처리했다. 전남선관위는 아예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서명만 한 공란 평정표를 낼 걸 요구한 뒤 자신들이 임의로 점수를 매겨 간부 자녀를 채용했다. 이리니 “차라리 시험 보고 한 줄로 세우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2030세대가 모두 같은 기준에서 평가받자고 목소리 내는 이면에는 이 사회가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 그런데도 과거의 도그마에 사로잡힌 진보는 시험보다 나은 대안은 내놓지 못하면서 ‘능력주의는 안 된다’며 이를 죄악시할 뿐이고, 보수는 이런 문제들에 별다른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바란다. 관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기본이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이번 사건은 그 함의를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어야만 한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72]

모든 것이 지나간다

백설공주에게 온갖 시련을 안겨준 건 따지고 보면 못된 왕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지 묻는 말에 매번 곧이곧대로 대답한 거울이었다. 아름다운 외모만이 자기의 부와 권력을 지켜준다고 믿은 왕비는 백설공주의 미모가 더해갈수록 점점 커지는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혔으니 말이다. 만약 왕비가 눈치 없는 요술 거울 대신 궁극의 진리를 말해 주는 미국의 미술가이자 철학자 에이드리언 파이프(Adrian Piper·1948~)의 거울을 갖고 있었다면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얼굴을 비춰보기 딱 좋은 크기의 고급스러운 거울에는 ‘모든 것은 사라진다’는 글귀가 금박으로 새겨져 있다. 더 냉정하게 번역하자면 ‘결국 모두를 빼앗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는 파이프의 똑같은 거울 여섯 점이 서로 다른 전시실에 진열되어 있다. 13세기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기사의 석판 앞에, 오색찬란한 고딕 시대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옆에, 황금기를 누렸던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 가운데서 불쑥 튀어나오는 파이프의 거울은 죽음과 소멸이라는 피할 수 없는 결말을 상기시킨다. 종교적 열망이든 세속적 성취든 결국 모두가 유한한 인간의 일일 뿐, 영원한 건 없다.

파이프는 뉴욕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최상층 교육을 받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만 큼 암묵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하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사회적 편견에 대한 분노와 열망을 강렬한 퍼포먼스로 풀어놓던 그에게도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언젠가는 이 또한 모두 사라지리라는 해탈의 순간이 왔던 모양이다.



에이드리언 파이프, 모든 것 #4, 2004년. 타원형 거울에 금박을 입힌 글씨, 33×25.4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여야의 현재 압박은 ‘불복’ 예고와 다를 게 없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여야 정치권의 한법 재판소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가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근거와 이유가 차고 넘친다. 현재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야권 정치인과 야권 단체들은 현재 주변에서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단식 농성을 시작했고, 민노총은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에선 친윤계를 중심으로 현재에 탄핵 심판 변론 재개를 요구하거나 신속히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불법성이 확인된 이상, 탄핵을 신속히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와 민주당은 서로 고발장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불법적 내란 수사를 했으며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는 내란 동조라며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지권이 현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승복 선언보다는 현재를 압박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나서자 탄핵 찬반 세력 간 시위도 점점 격해지고 있다. 현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시위대가 옥실

을 주고받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게 양측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 현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의 격화로 이어질 것이다.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이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것은 이런 위험성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 국회, 민주당 모두가 현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는 공개적 의사 표시를 하고 지지층들에게도 이를 호소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여야의 행동은 현재 결정에 대한 불복 예고와 다를 게 없다. 탄핵 찬반 세력이 정면충돌하며 나라가 두 쪽 나는 사태를 정치권은 감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태는 현재가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현재는 오직 한법과 법원에 근거해 엄중하게 중심을 잡는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현재가 대통령 탄핵 심리는 서두르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 결정은 미루면서 민주당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절차적 오류가 없도록 하면서 증거와 법리뿐만 판단을 해야 한다.

계속되는 李 대표의 황당 음모론

주요 정치인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과 윤 대통령) 한패라서 그런 것”이라며 “내란 혐의에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고 했다. 전날엔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고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석방 계획을 미리 짜고 구속 시한 등을 일부터 어겼다는 것이다.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치에서 과장되고 이상한 주장은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 황당한 말을 한 사람이 여론조사 때마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대선 주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검찰은 계엄 사태 이후 가장 먼저 수사에 뛰어들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계엄 5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체포했다. 수사 주도권을 경찰과 공수처에 빼앗길까 봐 앞뒤를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후 계엄 연루 장성도 줄줄이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내란 우두머리’라고 명시돼 있다. 이 공소장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모든 것이 검찰과 윤 대통령이 짜고 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한 민주당 의원은 “기분 좋아 밥맛을 살렸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짜고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이 법원인데도 검찰만 비난하고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표는 2년 전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민주당 내 일부가 검찰과 짜고 한 짓”이라고 했다. 비(非)이재명계를 향해선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비명계는 ‘검수완박’으로 검찰과 대립해 왔는데 갑자기 검찰과 찼다는 주장이 상식에 맞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모두 ‘적들이 짜고 한 짓’이라는 식이다.

이 대표는 공군 오펜 사고에 대해서도 오폭이 아니라 “민가를 상대로 사격한 것”이라고 했다. 군인들이 ‘살인’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금’과 ‘상속세’ 처리, 정말 못 하나 안 하나

여야가 10일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30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44%를 고수하면서 추경예산 편성 같은 다른 논의마저 결렬됐다고 한다.

상속세, 추경예산, 반도체특법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현안들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논의해야 하고 합의되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엔 이런 원칙과 상식이 설 자리가 없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의견이 상당히 근접해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밝힌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고 이날도 “빨리 하자”고 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1997년부터 28년간 바뀌지 않았다. 근본적 개혁에는 못 미친다고 해도 합의되는 부분부터 빨리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도 여야 주장에 큰 차이가 없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

소득대체율 여야 차이는 1%다. 1% 차이도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없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금도 매일 885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1년이면 32조원의 적자가 쌓인다. ‘1%’ 때문에 개혁을 못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인기 없어 하기 싫은 것을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하는 척하다가 그만둘 핑계를 찾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추경예산 편성과 반도체특법별 제정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은 권력 공백기로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적은 시기다.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개혁에는 적기라는 뜻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다시 개혁의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다.

이제 얼마 안 있어 현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어떤 결론이 나든 정치권은 격동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연금 개혁 등이 모두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그 전에 이 국가적 과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가.

개신교 정신, 왜 광장에 나왔나

못난 국민의힘, 밀리고 배신 … 《자유·민주·공화 시민》尹 대통령 1차 구했다

2차는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 … 현재 더욱 압박해야
가치 수호에 무능한 국회 … 개신교 나설 수밖에
종교 자유 없는 중공 위성국가화(제2 홍콩) 우려한다

끝까지 댈지 건 《법 기술자들》

3월 8일 오후 3시 뉴스는 전한다. “대검찰청이 즉시향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다는 뜻이다.

이 간단명료한 당연지사와 사법규정이 왜 이렇듯 지체되었나? 《검찰 일각》이 윤 대통령 석방을 한사코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인간형이? 어떤 《법 기술자》가?

진정한 학자, 허영·이인호·이호선

상양(商陽, 기원전 390년 ~ 338년) 같은 자들이었을까? 그는 《법의 지배》 아닌 《법에 의한 지배》로 진시황에 반대한 지식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전체주의 일인 독재》를 강제한 《법 기술자》였다

이런 자들은 출세를 위해 그때그때의 궂발에 짊어지게 붙는다. 이들은 《무엇이 땀받기는 정의》이고 《무엇이 땀받하는 불의인가》에는 관심 없다. 《무엇이 내 출세에 이로운가》에만 관심 있다.

지금의 좌익 대세(大勢) 하에서도 이 점은 똑같다. 자칭 《엘리트》들이 다투어 《좌파-강남좌파》가 된다. 그래야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좌파 사법부》/《좌파 수사기관》 요직에 발탁될 것이기에.

물론, 허영·이인호·이호선 교수 같은 정도(正道)의 헌법학자들도 있다. 이분들의 《용감한 논전(論戰)》이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발리 요설》을 깨부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아니오”가 대한민국 구한다

좌익 홍위병 시대임에도 대한민국이 이나마 망하지 않은 건 그래도, 이 메스꺼움을 향해 “아니오!”라고 외친 《쟁야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재확인한다.

3월 8일 토요일에도 광화문·여의도 광장 등에서 수십만 자유·민주·공화 《시민》/《국민》/《2030》/《대학생》/《어머니 아버지》/《할머니 할아버지》/《손자》들의 대행진이 활화산처럼

분출했다. 이 파도가 역사의 풍향을 바꿨다. 대한민국 만세로!



▲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가 적중했다. 변호인단이 권고한 《보석신청》 대신 《탄핵(구속취소 청구)》가 맞을 밝혔다. 주먹을 불끈 쥐고 걸어서 구치소를 나섰다. ◎ 정성윤 기자

3월 8일 오후 5시 47분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그가 서울 구치소 정문을 나섰다! 저만치 오고 있다! 손을 뻗혀 든다. 주먹을 불끈 쥐면! 국민에게 고개숙여 인사한다. 미소 짓는다! 이겼다! 이겼다! 자유·공화시민이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

개신교가 나설 수밖에, 왜?

이 거대한 역전 저변엔 《자유》/《인권》/《법치》/《시장》/《공정의 가치》를 떠맡은 《개신교 정신》이 있었다. 광화문의 《대국본》과 여의도의 《세이프 코리아》!

그 가치들은 마땅히 국민의힘이 선포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못났다. 일부는 배신했다.

자유 한국인들, 윤 대통령 석방에서 더 큰 싸움으로 가자! ① 《중공 패권주의》 축출! ② 《반 국가세력》 척결! ③ 《사법 카르텔》/《선관위 가족회사》/《정치 현재(虐政)》/《좌파공권력》 청산! ④ 《기회주의 언론》 비판! ⑤ 《좌파에 먹힌 1987년 체제》 경신!

자유 시민의 《대한민국 재건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① 윤 대통령 탄핵 각하! 직무 복귀! ② 불법체포-불법감금 처벌! ③ 《조기대선》 박살!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3월 8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37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